
 금융위원회	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 금융감독원	
보도		2016.4.6(수) 15:00 이후		배포	
				2016.4.6.(수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훈(02-2156-9830)	담 당 자	조 성 조 사무관(02-2156-9841)
	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송 영 상(02-3145-8730)		장 동 민 팀 장(02-3145-8710)

제 목 : 「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」 개최

1 간담회 개요

- '16.4.6(수)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기 조사·수사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「**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**」를 개최함
 -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생생한 **현장 목소리 및 애로사항**을 청취하고,
 - 이와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향후 **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방지**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

<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요>

- **일시/ 장소** : 2016.4.6.(수) 15:00 ~ 16:00 /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
- **주요 참석자**
- (금융위) 금융위원장 (금감원) 금융소비자보호처장
 - (검찰청) 보험범죄대책반 (경찰청) 경제범죄수사계
 - 보험회사 SIU 실무자, 생·손보험회, 신용정보원 등

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요지

-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조직화·흉포화되고 적발금액이 계속 증가*하는 등 사회전반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함

* 보험사기 적발금액 : (13년) 5,189억원 → (14년) 5,997억원 → (15년) 6,549억원

-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「보험사기방지특별법」이 16.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

- 동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정의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동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, 보험사기 조사·수사 관련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함

- 동 특별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“범죄인지→수사→처벌→사후조치”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

- 이를 위해서는 **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**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, 검찰·경찰·금감원·신용정보원·협회 등의 **협력을 당부함**

- ☐ 한편, 일각에서 **보험회사**가 보험계약자에게 **보험금 지급 지체·거절·**
삭감하는데 **동 특별법을 악용할** 소지가 있음을 우려함

-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동법에서 **보험계약자 보호 규정**이 마련*된 만큼, 금융당국은 향후 **하위법령 제정과정**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

*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·거절·삭감 할 경우 과태료 부과

3 주요 논의내용 및 향후계획

< 하위법령 정비 >

- 금융위는 '16.9월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*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

* (6월) 입법예고 → (7~8월) 규제위·법제처 심사 → (9월) 차관·국무회의 → (9월말) 시행

-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'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'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계획임
- 또한 수사기관에 자료제공,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기관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

<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 선진화 >

-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개발 및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직적·지능적·체계적 조사능력 제고를 도모

- ① 신용정보원의 보험회사·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((가칭)보험사기 다잡아)을 구축
 - 보험회사·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('16년말)하여 단기·다수의 고액 보험가입자 선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추출
 - 보험금 청구·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* 등 통계 시스템에 기반한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 도입('17년중)

* 보험금 청구기관별 보험금 청구액·청구기간 등의 평균·분포·상대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허위·과잉 청구 등 보험사기를 사전 인지하는 시스템

- ②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*를 통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 강화

* SNA(Social Network Analysis) 기법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·보험설계사·환자간, 정비업체(렌트카업체)·가해자간 공모 등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 적발

< 관계기관간 보험사기 수사 공조 강화 >

-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*의 상설조직화 추진 및 동대책반의 기획수사 등 활동 지원 강화

* 현재 서울중앙지검내 17년말까지 한시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검찰·경찰·국토부·금감원·심평원·건보공단·보험협회·근로복지공단 등으로 구성

-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추진시,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과 각 지방청간 수사간담회 개최 등 수사에 적극 협조

<첨부>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1부.